

# 나라살림 리포트 2020-제32호

##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분석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가 매년 운영되고 있다. 해당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과 같이 사업 존속이 적절하다는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들이 적은 편이어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단순히 연장여부에 대한 판정뿐이 아니라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 이후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서 유사한 내용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편성 및 설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들과 보조금지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들의 문제 요소들을 해당 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2020년 평가대상 국고보조사업 수는 총 241건이었으며 이 중 폐지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평가대상 사업의 7.9%를 차지하였다. 2018, 2019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2020년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의 수는 2018년 폐지 관련 판정 사업의 수 비중은 3.0%, 2019년 2.9%임을 고려하면 이전연도에 비해 증가했으며, 통폐합 판정(5건)이 이전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폐지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 비중은 2.5%로 2018년 0.8%, 2019년 1.3%에 비해 높게

---

나타났으며, 감축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 비중은 23.7%로 2019년 전년도(11.8%)에 비해서 늘어났다.

2020년 평가에서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의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19개이며, 폐지 판정된 19개 사업의 사유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폐지 판정 사업 중 문제 요소가 있는 사업은 '전기시설안전관리', '보훈단체운영', '보훈단체선양활동등',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정보화)',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6개로 판단되며, 해당 사업들의 문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폐지 판정을 받지 않는 사업 타당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도 사업성과가 저조하고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에 사업타당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신문발전지원', '광고산업활성화', '청소년국제교류지원',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방발)(정보화)',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청소년참여지원',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전력산업홍보' 9개 사업들의 문제요소도 살펴보았다.

---

## 1. 서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가 매년 운영되고 있다. 해당 평가에서는 크게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지며,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및 '통폐합' 판정이, 사업의 타당성이 낮지는 않지만 효과성, 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사업방식변경' 판정이 부여된다.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에 대한 판정 사업 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평가대상 사업 중 5% 내외로 사업 존속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업 수는 대체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기존의 예산규모와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여 기존과 같이 사업 존속이 적절하다는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들이 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달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감축'과 기존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된 사업 수가 매년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단순히 연장여부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재정사업이 각 사업이 목적으로 두는 바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정밀히 설계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낮고 낭비요소가 높은 사업이 되기에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해당 사업을 차별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 이후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서 유사한 내용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편성 및 설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지출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의 문제 요소를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들과 평가 항목인 '사업 타당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일부 사업들 중 사업필요성과 효과성이 낮아 보조금지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 요소들을 해당 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 2.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현황

###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개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국고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지칭하며, 기본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조사업의 합

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평가에서는 ①보조사업의 타당성과 ②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각각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 당 배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2020년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결과

영역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보조사업의 타당성(80)	보조사업 범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②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보조사업의 효과성	30	①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및 기간,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고려 ②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고려 ③ 보조사업이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고려
	보조사업의 필요성	30	① 보조금 외 다른 정책수단은 없는지, 유사 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는지 고려 ②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지 고려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를 고려
	사회적 가치 실현	3 (가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20)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	(지자체 보조)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민간보조)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	①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고려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정보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고려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	①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고려 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려
	자체 사업관리 노력	3 (가산)	사업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노력이 우수한지 고려

출처: 기획재정부(2020). 「2020년 국보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보조사업 평가단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조사업의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 방식변경, 정상추진으로 최종판정을 도출한다. 평가지표 총점 기준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폐지 또는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의 판정이 부여된다.

## 2) 2020년 평가결과 분석

2020년 평가대상 국고보조사업 수는 총 241건이었으며, 이는 2018년 375건, 2019년 449건에 비해 100건 이상 적은 규모이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즉시폐지 2건, 단계적 폐지 12건, 통폐합 5건, 감축 68건, 사업방식변경 130건, 정상추진 24건으로 사업방식변경 판정이 가장 많았다.<sup>1)</sup>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평가대상 사업의 7.9%를 차지하였다.

<표 2> 2020년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결과

(단위: 건, %)

구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합계
사업수	2	12	5	68	130	24	241
비율	0.8	5.0	2.1	28.2	53.9	10.0	100.0

출처: 기획재정부(2020).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8년, 2019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2020년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의 수는 2018년 폐지 관련 판정 사업의 수 비중은 3.0%, 2019년 2.9%임을 고려하면 이전연도에 비해 증가했으며, 통폐합 판정(5건)이 이전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2018~2020년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결과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즉시폐지	1	0.3	4	0.9	2	0.8
단계적폐지	9	2.4	8	1.8	12	5.0
통폐합	1	0.3	1	0.2	5	2.1
감축	96	25.6	105	23.4	68	28.2
사업방식변경	121	32.3	176	39.2	130	53.9
정상추진	147	39.2	155	34.5	24	10.0
<b>합계</b>	<b>375</b>	<b>100.0</b>	<b>449</b>	<b>100.0</b>	<b>241</b>	<b>100.0</b>

출처: 기획재정부. 연도별 「국보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1) 이는 사업방식변경으로만 판정한 사업 건수에 해당하며,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에도 사업방식변경의 판정이 덧붙여진 사업들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다.

2020년 예산규모별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즉시폐지는 39억원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편성된 예산(8조 5,526억원)의 0.05%에 차지하였고, 단계적폐지 1,540억원(1.8%), 통폐합(527억원, 0.6%), 감축 20,255억원, 사업방식변경 54,054억원(68.2%), 정상추진 9,112억원(10.7%)에 해당하여 즉시폐지의 예산비중이 가장 낮았고, 사업방식변경의 예산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2020년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결과

(단위: 억원, %)

구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합계
예산(억원)	39	1,540	527	20,255	54,054	9,112	85,526
비율(%)	0.05	1.8	0.6	23.7	68.2	10.7	100.0

출처: 기획재정부(2020).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8~2020년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평가대상 사업 수가 이전년도 사업 수에 비해 적음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 예산액이 8조 5526억원으로 이전년도 평가대상 사업 예산액에 비해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2019년 정상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이 비중은 40~50%에 이르렀으나 2020년에는 10.7%에 불과하였고 동년도에는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된 예산액의 비중이 이전년도들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0년 폐지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 비중은 2.5%로 2018년 0.8%, 2019년 1.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감축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 비중은 23.7%로 2019년 전년도(11.8%)에 비해서 늘어났다.

<표 5> 2018~2020년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결과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즉시폐지	10	0.01	34	0.03	39	0.05
단계적폐지	885	0.7	1486	1.3	1,540	1.8
통폐합	14	0.01	17	0.01	527	0.6
감축	28,285	21.7	13633	11.8	20,255	23.7
사업방식변경	44,206	33.9	40911	35.4	54,054	68.2
정상추진	57,124	43.8	59382	51.4	9,112	10.7
합계	130,524	100.0	115,463	100.0	85,526	100.0

출처: 기획재정부.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 3) 2020년 폐지사업 현황 및 문제요소 분석 대상사업 선정

2020년 평가에서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의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19개이다.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들은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효과적 수단의 존재, 성과저조 등의 문제 요소를 가지고 있어 해당 판정을 받기도 하였지만, 예정된 사업목표의 달성이 임박했거나 의도하지 않게 정책상황이 바뀌어 사업 존속이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되어 해당 판정을 받은 문제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사업들도 존재한다.

폐지 판정된 19개 사업의 사유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폐지 판정 사업 중 문제 요소가 있는 사업은 '전기시설안전관리', '보훈단체운영', '보훈단체선양활동등',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정보화)',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6개로 판단된다.

해당 7개 사업을 제외한 12개 사업은 적절한 보조기간의 충족 등을 포함한 사업목표 달성 임박, 소관부처의 향후 사업계획 부재 등의 사유로 폐지되었다. '대전산성-구례광역도로건설',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구축', '세계엑스포참가지원', '폐업지원금' '섬발전협력사업추진',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위해우려매립시설오염확산방지및안정화', '폐업지원금'은 사업목표 달성 임박,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 '3대문화권생태관광기반조성(지역지원)'은 향후 사업계획 부재,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은 지자체로의 이양으로 폐지 사유를 구분할 수 있다. 이외 '문화정보다부처연계서비스플랫폼구축(정보화)',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은 폐지사유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존재이지만 사업효과성이 낮지 않고, '응급의료전공의수련보조수당지원'은 사업성과가 낮은 수준이지만 이미 폐지된 일반회계 사업과 짝을 이루어 사업이 편성되었고 해당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판정을 받았기에 문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지는 않고자 한다.

<표 6> 2020년 '폐지' 판정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전체 점수	평가사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다부처연계서비스플랫폼구축(정보화)	1,156	통폐합 및 사업방식변경	60.4	2018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 사업과 통합운영이 필요함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시설안전관리	2,355	통폐합 및 감축	60.8	수행업무의 유사성, 동일한 보조사업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응급전기시설안전점검' 사업과 통합함이 바람직함

부처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전체 점수	평가사유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840	통폐합	82.7	효과성은 높으나 중소기업부의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양성'과 중복 사업임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운영	44,321	통폐합 및 사업방식변경	57.6	개별 사업만으로 사업효과 및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어려워 두 사업간 통합이 필요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3,989	통폐합	57.6	
환경부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	80	즉시폐지	40.8	사업집행상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
국토교통부	대전 산성-구례광역도로건설	3,829	즉시폐지	78.1	'20년 준공사업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후 연장의 필요성은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정보화)	1,169	단계적폐지	44.7	보조사업의 성격과 내역사업의 수행내용을 고려할 때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직접수행이나 민간위탁 중심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행정안전부	섬발전협력사업추진	2,000	단계적폐지 및 사업방식변경	80.3	열악한 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당초 사업계획인 2021년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1,000	단계적폐지	78.1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에 대한 임시적 지원이므로 연장기간 이후 종료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구축	2,640	단계적폐지	60.1	장비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1년 말 센터중공을 완료해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엑스포참가지원	22,208	단계적폐지	54.5	해당 엑스포가 종료되는 2021년 4월까지가 한시적인 사업기간으로 사업추진 후 폐지 예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전공의수련보조수당지원	877	단계적폐지	57.7	일반회계의 지원 사업(응급의학 이외 전공의 대상)이 폐지 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해 동 사업도 단계적 폐지(2021년)를 추진 중임
환경부	위해우려매립시설오염확산방지및안정화	1,131	단계적폐지 및 사업방식변경	80.5	침출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현재의 사업기간 (6년, 2022년말 종료)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부처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전체 점수	평가사유
여성가족부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	3,501	단계적폐지	69.4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동 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와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자체 이양이 바람직함
해양수산부	폐업지원금	900	단계적폐지	74.7	"FTA 농어업법"에 따라 2020년 일몰되지만, 지원금은 이듬해인 2021년 지급되어 2021년 폐지가 바람직함
해양수산부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	15,408	단계적폐지	79.9	2022년 사업종료 예정으로 계획종료 이후 사업계획이 부재함에 따라 자연 종료로 간주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34	단계적폐지 및 사업방식변경, 통폐합	52.1	부처 내 타 사업인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과의 유사성이 있으며, 현행 성과목표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고려됨
문화체육관광부	3대문화권생태관광기반조성(지역지원)	103,112	단계적폐지 및 사업방식변경	73	국가계획에 의한 사업완료에 의한 2021년 종료예정임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 중 문제 요소가 높은 6개 사업의 평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대체로 효과성 및 필요성을 비롯한 사업타당성과 전체 점수가 낮은 수준이다.

<표 7> 2020년 '폐지' 판정 사업 중 문제 요소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전체 점수	사업 타당성			관리 적정성 (20)
					총점 (80)	효과성 (30)	필요성 (3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시설안전관리	2,355	통폐합 및 감축	60.8	40.8	15	15	20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운영	44,321	통폐합 및 사업방식변경	57.6	43.6	12	15	14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3,989	통폐합	57.6	43.6	12	15	14
환경부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	80	즉시폐지	40.8	32.8	11	12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정보화)	1,169	단계적폐지	44.7	29.8	0	21	14.9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34	단계적폐지 및 사업방식변경, 통폐합	52.1	39	15	12	13.1

출처: 기획재정부(2020),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함

한편 폐지 판정을 받지 않는 사업 타당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도 사업성과가 저조하고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에 해당 사업들의 문제요소도 보다 정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 타당성(총 80점)에서 45점 이하인 사업들 중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을 제외한 문제 사업을 9개를 도출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은 모두 감축 판정과 전체점수에서 60점 이하<sup>2)</sup>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사업타당성 45점 이하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예산액	평가결과	전체 점수	사업타당성			관리 적정성
					총점 (80)	효과성 (30)	필요성 (3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	4,428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58.4	45	15	18	5.8
문화체육관광부	광고산업활성화	2,306	감축	57.8	45	15	18	5.8
여성가족부	청소년국제교류지원	4,776	감축	54	45	15	18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 조성(방발)(정보화)	588	감축	55.5	43	8	21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805	감축	58.9	42.4	15	18	5.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 개발지원	786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57.5	42	15	12	7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지원	2,950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52.6	38	12	18	2.4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4,518	감축	50.4	34	11	15	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홍보	2,487	감축	39.9	27.4	8	12	2.4

출처: 기획재정부(2020).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함

상기 사업 9개의 평가사유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저해하는 문제 요소가 제시되었으며, 일부 사업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로 감축 외에 사업방식변경의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2)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의 전체점수 평균은 74.5점이며, 사업타당성 평균은 58.5점이다.

<표 9> 사업타당성 45점 이하 사업 평가사유

부처	사업명	평가사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문화체육관광부	광고산업활성화	내역사업의 성격이 지자체와의 관련성이 높아 보조율 감축이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성과지표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없음
여성가족부	청소년국제교류지원	특정 단체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내내역 사업이 포함되어 사업의 합리성을 저해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 경조성(방발)(정보화)	내역사업에 따라 법적 근거 및 예산 산출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전체 세부사업의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3개 내역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내역사업 구성의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불충분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 개발지원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협소하고, 최근 2년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여 독립된 보조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불분명함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지원	내역사업으로 청소년 참여 촉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편성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내역사업의 편성근거 및 기대효과, 예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내역사업이 네트워크 구성·운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 사업이 전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실제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홍보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일부 내역사업의 주요 활동이 홍보 중심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상의 폐지 판정 사업 6개, 감축 판정 사업 9개를 분석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가 낮은 각 사업의 문제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각 부처별 예산서, 언론보도 등을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3. 2020년 국고보조사업 문제요소 분석 및 사업평가

#### 1) 폐지판정 사업

##### ① 전기시설 안전관리

동 사업의 목적은 국가 제반 전기안전 활동수행으로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는데 있으며, 2020년 '전기시설안전점검(5.6억원)', '전기안전점검장비(7.0억원)', '중대사고조사(1.0억원)', '전기재해종합분석센터구축(10억원, 신규)'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동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 평가에서는 사업방식변경 판정을 받았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전기시설안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통폐합 및 감축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60.8	40.8	4.6	15	15	5.2	20	5	5	10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보조사업 시행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방식변경		2014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0		2,355		1,128		1,395		1,395	

내역사업 중 '전기안전점검장비'는 전기안전점검용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 기준 '디지털다기능계측기', '크램프메타', '누설전류계', '휴대용적외선열화상장비', '전원품질분석기'에 대한 장비를 지원 하였다. 평가단은 이 중 범용성 장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 내역사업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사용중 현장점검과 취약계층 전기고충해소 등 설비 안전도 향상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고 고려되었다.

성과 측면에서도 동 보조사업은 15점을 받으며 성과가 높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동 사업이 포함된 단위사업에서는 '전기사용량대비 전기화재건수', '전기재해 예방효과'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sup>3)</sup> '17년과 '18년 실적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19년에는 전년('17년 및 '18년) 대비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였다.

3) '17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성과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사용량 대비 전기화재발생건 수' 외에 전기사용량 대비 피해규모액을 고려하여 대규모 전기화재를 사전적으로 예비하는 것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10> 전기시설안전관리 성과지표 및 실적 현황

구분	성과지표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전기사용량 대비 전기화재건수(하향) (단위: 건)	단위사업	목표	15.3	14.8	15.7
		실적	15.8	17.5	-
		달성도	96.7	81.8	-
전기재해 예방효과(상향) (단위: 점)	단위사업	목표	90.1	92.8	93.4
		실적	92.7	93.2	93.4
		달성도	102.9	100.4	100.0

출처: 기획재정부(2020).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1년 예산안에서는 동 보조금 사업의 모든 내역사업이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에 통합되었다. '전기시설안전점검(5.6억원)'과 '중대사고조사(1.0억원)'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문제성 사업으로 평가된 '전기안전점검장비'는 전년대비 2.5억원 감액되었다. '전기안전점검장비'의 '21년 세부 편성안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편성된 5개 장비 중 디지털다기능계측기와 누설전류계를 제외하고 지원이 배제되어 '20년 평가결과가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고려된다.

<표 11> '20년 및 '21년 전기안전점검장비 편성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장비명	'20년 예산액	'20년 산출내역	'21년 예산액(안)
디지털다기능계측기	56	@900천원 × 62대 = 56,000	239
크램프메타	46	@300천원 × 153대 = 46,000	-
누설전류계	216	@1,200천원 × 180대 = 216,000	204
휴대용적외선열화상장비	138	@900천원 × 153대 = 138,000	-
전원품질분석기	242	@22,000천원 × 11대 = 242,000	-
합 계	698	5종 559대	443

출처: 기획재정부(2020).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②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선양활동 등

'보훈단체 운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장병의 유지를 계승하고 국민의 호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회 등 13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며, '보훈단체선양활동'은 보훈단체별 특성에 맞는 각종 추모·선양·기념·홍보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보조사업 모두 단일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통폐합 및 사업방식변경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57.6	43.6	7.6	12.0	15.0	7.0	14.0	3.5	3.5	2.0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보훈단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감축		2013			
구분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보훈단체선양활동등	30,392	4,677	4,451	4,081	20,821				
보훈단체운영		44,423	25,131	25,337					

두 사업은 2017년까지 한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18년 분리되었다. 그러나 두 사업의 지원목적과 지원대상이 동일하고, 사업 분리 이후에도 동일한 부처 담당자가 2개로 분리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이전에 의한 지원방식에서도 두 사업 간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분리된 이후 시너지 효과가 악화되어 사업효과가 반감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보훈단체선양활동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훈단체의 국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사례(태풍피해 복구 활동, 수증 정화,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는 "보훈단체 운영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성이 존재하며, 두 사업의 별도 운영 시 성과 창출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두 사업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두 사업 간 통합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평가단은 보조금 외의 다른 정책수단을 찾기 어려워 동 사업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보훈단체의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각종 단체 활동의 자유성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금이나 기부금 조성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2021년 예산안에서는 두 사업이 단일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은 45억원, 보훈단체운영은 259억원 편성되었다.<sup>4)</sup>

### ③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

동 보조금은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17개 광역단체에 총 8천만원(4,706천원×17개 시도)이 지원되었다.

4) 2020년 보훈단체운영 예산액에는 '4개단체 중앙회관 매입지원' 182억원이 포함되어 전년대비 예산액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즉시폐지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40.8	32.8	7.0	11.0	12.0	2.8	8.0	2.0	2.0	4.0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보조		-		2013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0		80		80		80		80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인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및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행위를 감시·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감시단의 활동 실적인 점검 업소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942개소, 2018년 6,315개소로 지자체의 지도점검 업소수 대비 비율은 각각 12%, 14%로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에 양적으로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속의 질과 관련된 적발률 제고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려된다. 2018년 감시단의 점검업소 수는 6,315건, 위법사항 적발건은 223건으로 적발률이 3.5%에 불과하여 지자체 직접수행 평균 적발률 18.4%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감시단원의 낮은 전문성에 기인할 수도 있는데, 감시단원 약 1,800여명에게 지급되는 일인당 활동비가 4.3만원에 불과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활용이 어려워서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지표에서도 동 보조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인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의 성과지표가 단순한 진척률로 되어 있어서 정책의 목표달성정도나 지표 목표의 야심도 정도 등을 나타낼 수가 없어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를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감시단에 지역의 민간단체 회원이나 기업의 환경관리사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이 감시단으로 활동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기의 문제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정단은 보조금이 아닌 환경법규관련 단속의 양적 충분성, 질적 전문성, 집행의 엄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2021년 예산안에서 해당 보조금 사업은 '20년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미편성되었다.

④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

동 보조금 사업은 크게 '방송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 '방송장비산업 해외시장 확대' 2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된다. 전자의 보조금 내역사업은 '차세대방송기술 실증인프라구축(2.9억원)'이며, 후자(8.3억원)는 '해외 방송음향 전시회·로드쇼 등 해외시장 개척', '방송장비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지', '차세대 방송 서비스모델 개발 및 방송기술 실증' 의 세부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단계적폐지 및 감축, 사업방식변경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44.7	29.8	2.0	0.0	21.8	5.8	14.9	3.5	2.9	8.5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한국전파진흥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방식변경		2017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949		1,169		757		1,019		811	

본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방송장비기업으로 방송장비기업 경쟁력 강화와 방송장비기업 해외시장 레퍼런스 구축 및 수출 달성이라는 사업목적은 타당하나, 현재 성과지표를 고려하였을 때 성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동 보조금사업의 성과지표는 '방송장비 시험서비스 지원 건수'와 '방송장비 지원기업 수출계약액'으로 설정되어 최근 3년 동안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판정단은 '방송장비 지원기업 수출계약액'은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되었다고 고려되기에 해당 보조금 사업에 가시적 성과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으며, 방송장비 지원기업 수출계약액의 경우는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여야 성과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동 보조금 사업은 매년 세부 내역사업들의 종료와 함께 사업목적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사유가 미흡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엄밀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2020년에 변경된 '차세대 방송서비스 기술테스트 및 실증'에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신뢰도 제고와 인지도 향상이 성과 제고를 위한 관건이지만 구체적 전략이 부재하다고 고려되어 목표와 성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상기 사업의 문제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동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판정단은 차세대 방송기술 도입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방송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해당 보조금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접수행이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21년 예산안에서는 '차세대방송기술 실증인프라구축' 세부 내역사업이 '방송장비산업 해외시장 확대' 내역사업에 편성되는 등 내역사업 내용이 변경되며 전년도에 비해 2억원 감소한 9.5억원이 편성되었다.

⑤ 국가유공자등 위로격려

동 보조금은 유공자 자녀의 자긍심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확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자녀 동아리인 호우회 활동중 봉사활동 및 나라사랑확산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우회 건전활동 보조금'의 단일 사업으로 구성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단계적폐지 및 감축, 사업방식변경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52.1	39.0	7.0	15.0	12.0	4.0	13.1	3.5	2.6	7.0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대학호우회		민간경상보조		-		2016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32		34		34		36		36	

본 사업의 최근 3개년(2017~2019년) 예산 실적행률은 2017년 72.2%로 저조하였으나 이후 2018년 91.7%, 2019년 100%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동 보조금의 목표달성도는 2018년 74.3, 2019년 38.5로 목표치를 낮추고 있음에도 최근 2년 동안 급히 하락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해 최종 수혜자인 대학재학 보훈자녀도 감소하고 있는 동시에 동아리 가입하려는 대학생이 줄어들며 사업의 대상자 풀(pool)이 감소하는 데에서 비롯되며 향후 사업 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호우회 건전활동 보조금 성과지표 및 실적 현황

구분	성과지표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호우회가입 보훈대상자 인원(명)	보조사업	목표	70	70	52
		실적	68	52	20
		달성도	97.1	74.3	38.5

출처: 기획재정부(2020). 「2020년 국보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이 같이 대학생인 회원 가입과 활동 참여 열의가 감소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 외에도 최근 일반학생의 가입을 허용하여 당초 국가 유공자 자녀로 구성된 “호우회”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점(2019년 전체 호우회 인원 892명중 유공자녀회원 비중이 2.2%에 불과), 대부분의 대학생 동아리 봉사활동은 외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동아리인 “호우회”의 봉사활동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고려하면 근본적인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1년 예산안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2백만원 감소한 3.2천만원이 편성되었다.

## 2) 감축판정 사업

### ① 지역신문발전지원

동 보조금 사업은 2020년 ‘기획취재지원사업(5억원)’, ‘지역신문제안사업(4억원)’, ‘지역민참여보도지원(2억원)’, ‘소외계층 구독료지원(23억원)’,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11억원)’의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지역신문발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기금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58.4	45.0	5.2	15.0	18.0	5.8	13.4	3.5	2.9	7.0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지역미디어교육 운영학교 등		민간경상보조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2005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5,238		4,428		4,753		4,391		5,491	

동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지역소외계층, 지역미디어교육 운영학교 등이며, 간접 수혜자는 지역신문 독자, 지역시민, 지역 사회복지시설, 지역 초중고교생, 지역사회 등으로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지만, 판정단은 정책효과가 크지 않아 사업의 필요성이 높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지역신문사) 중심으로 사업이 조정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소외계층지원사업 구독자 만족도', '지역신문활용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전년도 우선지원 신문사 평균 매출액'의 3개로 설정되었는데, 성과지표가 만족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지원 신문사 평균 매출액' 지표도 동 사업과 연관된 지표는 아므로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정책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내역사업 중에서 '지역도민참여 보도지원(2천만원×10개사=2억원)', '지역신문제안사업(1천만원×40개사=4억원)', '기획취재지원사업(1천만원×50회=5억원)'은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상당히 낮게 편성되어 해당 내역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려된다.

또한 동 사업의 근거가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2022년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 국가 보조로 사업을 유지하는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해당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정단은 사업목표를 재설정하고 지역신문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으로 개선하면서 예산을 일부 감축한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서 동 사업은 신규사업인 '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지원사업(8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규모로 편성되었다. 2017년에도 동 사업은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판정을 받고 이듬해 사업 예산이 감축되었는데, 2020년에도 동일한 판정결과를 받았기에 사업편성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효과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세심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 ② 광고산업활성화

동 보조사업은 2020년 '부산국제광고제 지원(7.4억원)', '청년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15.7억원)'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년 평가에서는 전자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다. 부산 국제광고제 지원은 2019년 기준 세부적으로 '언박싱 부산'을 통한 창업기업 제품 홍보, 기업 홍보 부스 운영, 광고산업 실무자 교육, 광고인재 육성(부대행사), 잡멘토링, 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사업은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라는 점에서 보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판정단은 사업 성격이 지자체와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변경

하고 보조율을 다소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2017년 평가결과에서도 단계적 감축과 단계적 폐지를 판정받았는데, 국고보조율이 2019년 기준으로 24.3% 수준으로 조정되었지만 2020년 다소 증가였기에 보조율을 25%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광고산업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57.8	45.0	5.2	15.0	18.0	5.8	12.8	2.9	2.9	7.0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부산광역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2013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1,199		2,306		1,050		1,260		1,640	

또한 동 보조사업은 효과성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성과목표가 내역사업(부산국제광고제 개최 지원) 단위가 아닌 단위사업 단위(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로 설정되고 해당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서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2.3억원 감소한 5.4억원이 편성되었고, '청년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또한 전년대비 9억원 감소한 6.6억원이 편성되어 '20년 평가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청소년국제교류지원

2020년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들은 전반적으로 국가 간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스카우트 연차회비 지원(2.3억원) 사업 같이 국제교류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며, 동 년도부터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내역사업에 지자체 자본보조인 '프리잼버리 기반시설 설치(10억원)'의 세부 내역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 중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16.4억원) 일부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는 모든 청소년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특정 청소년활동 그룹(스카우트, 아람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해당 청소년 단체 대상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판정단은 해당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청소년 역량 강화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예측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의 사업 참여 기회 균등에 기여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의 합리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청소년국제교류지원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54.0	45.0	7.0	15.0	18.0	4.0	9.0	3.0	2.0	4.0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민간단체, 지자체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20~)			-		2018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4,418		4,776		3,304		3,561		0	

더불어 민간 청소년 단체 사업을 포괄하는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해 별다른 사업 효과가 측정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매년 동일한 청소년 단체가 선정되어 수행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또한 높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단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16만을 넘어서는 등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교류 자체 보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심층 이해를 도모하거나, 해외 문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또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국가 간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사업방식을 개선하며 해당 사업 예산액을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서는 격년도 행사로 20년 편성된 국제청소년캠페스트가 미편성됨에 따라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예산액이 3억원 감소하였으며,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카우트 활동지원은 전년대비 6천만원 감액되어 '20년 평가안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고려된다.

#### ④ 공정경쟁이용자보호환경조성(정보화)

동 보조사업은 통신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통신요금제 추천, 단말기 정보 등

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합리적인 통신소비환경 조성지원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보조금의 개별 내역사업마다 별도의 목표가 존재하나, 이러한 3개의 내역사업이 하나의 보조사업으로서 어떻게 연계되는가에 대해선 충분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인다. 대국민 인식전환 및 홍보에 초점을 맞춘 1개 내역사업과 주관부처의 고유 업무를 민간보조를 통해 수행하는 2개 내역사업이 하나의 보조사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었는지에 대해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공정경쟁이용자보호환경조성 (정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55.5	43.0	8.8	8.0	21.0	5.2	12.5	2.0	3.5	7.0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민간경상보조			-		2009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588		588		906		726		501	

세부 내역사업인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정지의 경우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인 국민의 보호가 가능하고, '합리적 통신소비 환경조성지원'이 세부 내역사업인 이동통신 요금제 추천 및 할인반환금 조회, 결합상품 비교·추천 등의 정보제공 역시 직접수혜자로서 국민에게 편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정단은 이미 정보공유플랫폼이 구축된 상태에서 '합리적 통신소비환경 조성지원' 내역사업은 폐지가 이루어지더라도 민간단체를 통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던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에서 보조사업 성과지표를 단순 산출지표인 공정률로 설정되어 해당 내역사업이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보조사업이 상위 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기여한 부분이 단순히 정성적으로 제시되는 등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상기의 성과지표의 타당성 문제와 더불어 내역사업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100% 기준보조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의 예측감축이 필요하다고 고려된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5.9억원이 편성되었다.

⑤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동 보조사업은 국제기준에 부합한 전문 기술인 배출과 경쟁기반 우수 기술사 육성·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급 엔지니어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며, 2020년 '기술사육성및활용체계지원(3.5억원)', '기술사종합관리체계구축·운영(2.5억원)', '업적기반통합경력관리(2.1억원)' 등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내역사업은 여러 세부 내역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감축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58.9	42.4	3.2	15.0	18.0	5.2	16.5	5.0	3.5	7.0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한국기술사회		민간경상보조			-		2017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631		805		805		599		449	

먼저 동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기술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타당성은 미흡한 편으로 고려된다. 해당 법 제20조제1항에서 민간보조사업자에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민간보조사업자 수행 업무는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법적 근거와의 연관이 모호함에 따라 '업적기반 통합 경력관리' 등 내역사업 구성 및 산출근거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달성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동 사업은 성과계획서 상 주요 성과지표로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만족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업적기반 통합 경력관리 내역사업'의 경우 공정률 관련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동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초기임을 고려할 때, 공정률 관련 지표를 활용한 것의 한계는 인정되나, 동 사업 관련 실질적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업적기반통합 경력관리'가 미편성되며 동 보조금사업의 예산액이 전년대비 1.7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년 평가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⑥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동 보조사업은 관련 협회 혹은 기업이 자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훈련비 지원'에 대한 내역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57.5	42.0	7.0	15.0	12.0	7.0	15.5	3.5	3.5	8.5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예술의 전당 등 12개 기관		민간경상보조		-		2018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366		786		873		873		0	

동 사업은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소관 타 교육훈련 사업과 다수 중복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의 직접 수혜자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2019년 기준 19개, 2020년 기준 17개)과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2,586명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함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나 교육 참여자의 수가 적어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다. 평가단은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별도의 보조사업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처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동 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의 수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2020년 현재 훈련 프로그램은 광운대학교 등 17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훈련생 교육비 전액(100%)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각 1,000명을 교육훈련 할 목표로 예산이 계상 되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2개년도 연속 총예산액 대비 72%, 73%에 그쳐, 보조사업의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에게 훈련비를 100% 보조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어 자부담비율을 설정하여 지원규모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된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4.4억원 감소한 3.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원인원은 큰 수준의 변동이 없지만 지원단가가 전년대비 1인당 68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감소하여 20년 평가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고려된다.

⑦ 청소년참여지원

동 보조사업은 2020년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15.4억원)', 전국단위 청소년 행사 개최(9.1억원), 65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청소년참여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52.6	38.0	4.6	12.0	18.0	2.4	14.6	3.5	4.1	7.0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정상추진		2008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2,745		2,950		2,061		2,050		2,050	

동 내역사업의 일부 비목에 대해서 판정단은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서 청소년참여지원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의 행사 추진과 민간 자생적 네트워크인 청소년단체협의회 인건비, 청소년계 신년인사회 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성고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은 청소년특별회의 만족도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만족도로 구성된 '청소년참여활동 만족도'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지만, 사업 참여 만족도에 민주시민 육성이라든지 참여의 효능감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사업의 효과성을 적절히 판단할 수 없다. 더불어 청소년특별회의 이외의 청소년참여기구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189개소)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305개소) 운영 성과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지원 비용 대비 관리 등의 행정비용 과다하게 소요되며, 상기 문제요소들을 고려할때 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들 모두가 상위 정책목표인 “청소년들 에게 다양한 지역사회활동 기회와 체험기회 제공”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평가단은 청소년 참여기구가 청소년들이 수용자 친화적 정책을 생산하는 경험과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심화 탐구 기회, 전문가 및 행정 관리자와 소통 기회, 체계적인 협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요청하면서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을 제안하였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전국 단위 청소년 행사 개최’ 내역사업이 전년대비 2억원 감소하고, 나머지 내역사업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20년 평가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고려된다.

⑧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동 사업은 전력, 원자력,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잠재시장 선점을 위하여 기반조성, 인력양성,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원전, 전력, ICT 광융합 분야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기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31.2억원), ‘전력수출산업화(3.9억원), ‘차세대 ICT 융합 및 에너지효율 국제경쟁력 강화지원(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전력해외진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50.4	34.0	7.0	11.0	15.0	0.0	16.4	3.5	4.4	8.5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관련 기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방식변경		2014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4,385		4,518		2,977		4,028		4,621	

동 사업은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기업을 지원해야 할 타당성이 낮다고 고려된다.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동 사업의 지원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17년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동사업 내역사업 중 일부는 시장 지원정

책이기보다 국제협력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세대 ICT 융합 및 에너지효율 국제경쟁력 강화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해외시장조사, 해외 한국관 운영, 해외 마케팅센터 구축 등이 주요 활동이라는 점에서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지원사업' 등을 통해서도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내 타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존재한다.

효과성 또한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내역사업에 따라 정례협의회 개최, 인력교류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네트워크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각 내역사업이 실제 동 사업의 목표인 전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 성과지표가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대표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는데, '17년의 경우 원전수출 상대국 현지정보 분석보고서 건수를 성과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18년부터 원전수출대상국 및 운영국간 협력의제 개발건수로 변경하여 성과지표와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성과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전력산업 관련 대기업의 경우 보조율은 50%, 관련 중소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협회 등의 경우 75%가 적용되고 있는데, 중견기업 역시 중소기업에 준해 75%의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충분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평가단은 이에 예산 감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및 내역사업별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기준보조율 재조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서는 각 내역사업마다 일부 감액되어 전년대비 1.3억원 감소한 43.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 ⑨ 전력산업홍보

동 보조사업은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공과 권익에 이바지하는 전력산업의 전략적인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18년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19년부터 4개 내역사업으로 재편되어 2020년 '전력시장교육(1.4억원)', '전기절약홍보(7.6억원)', '신재생에너지홍보(12.1억원)', '전기안전홍보(3.7억원)'의 4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동 사업은 국민교육과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고유업무와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는 '신재생에너지홍보'의 내역사업의 경우 일부 중복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고려된다. 그리고 동 사업의 수혜자는 국민으로 폭넓게 정의될 수 있는데 정보전달 및 캠페인성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처		회계구분		판정결과			
전력산업홍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감축			
총점	사업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합계	법령 및 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집행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39.9	27.4	4.0	8.0	12.0	3.4	12.5	2.0	3.5	7.0
보조사업자		보조유형		17년 연장평가 결과		사업시행년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민간경상보조		감축		2014			
'21년 예산액(안)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1,984		2,487		2,618		2,104		2,259	

최근 몇 년간 개별 내역사업의 구성이 변경되는 가운데 연도별로 개별 내역사업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판정단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활동별 산출근거는 일부 구체적 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예산 산출내역의 합리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내역사업 간 세부활동 역시 콘텐츠개발(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및 홍보, 매체광고, 라디오 홍보, 뉴미디어 홍보 등 유사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내역사업별 정책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 사업의 성과 달성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동 사업은 내역별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로서 참여자의 만족도, 캠페인 참여인원, 인식도 등 단순 산출지표가 설정되어 명확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조유에 있어서 동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에 100%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판정단은 전기 안전,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대국민 교육과 홍보라는 점에서 국고보조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 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고유 업무와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현행 국고 보조율의 적용은 합리성이 부족하며, 실제 보조율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해 100%의 보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상기 제시된 예산 감축 과 더불어 성과지표 개선을 통한 철저한 성과관리가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서는 동 사업은 전 내역사업에서 감액이 이루어지면서 전년대비 5억원 감소한 19.9억원이 편성되어 '20년 평가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고려된다.

## 참 고 문 헌

기획재정부.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각 부처. 2020년 및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재정부 열림재정([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